

2023년도 하반기 안심행복 도시 강남 구현을 위한

건축공사관계자 안전관리 교육자료

강남구
GANG NAM GU

2023. 11.

목 차

목 차

I .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1.1. 일반사항

많은 건물들이 노후화와 재건축 및 재개발, 리모델링 등으로 인해 해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맞춰 해체과정에서의 사전 조치사항 및 허가(신고)시 검토사항, 공사현장 검토사항 등 사고방지를 위한 방법과 점검절차를 확실히 하여 체계적이고 내실화된 안전한 해체공사장을 만들어야 함.

■ 목 적

- 건축물의 해체계획 및 방법, 공사 중 구조안전성 확보 방안 등 해체공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보다 안전한 해체공사장을 만들기 위함

■ 해체대상 건축물 분류(법 제30조, '22.8. 개정 · 시행)

○ 신고 대상

-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일부 해체
- 연면적 50㎡ 미만 & 건축물 높이 12m 미만 & 3개층 이하
(지상 · 지하층 포함)
-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 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
-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허가 대상

- 신고 대상을 제외한 건축물의 해체
- 신고 대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30조2항)
 - ▷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 ▷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 ▷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 조례로 정하는 경우

○ 착공신고 대상

- 모든 해체공사장 (해체허가 및 신고대상 건축물)
 - ▷ 서울시방침 및 운영지침에 따라 모든 해체공사장은 착공신고를 제출

○ **심의대상 건축물** (법 제30조 6항, 서울시 건축조례 제7조)

- 허가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

▷ 건축물의 해체를 허가하려는 경우

▷ 건축물의 해체를 신고받은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서울시 건축조례 제7조 1항 2호(구 위원회 심의사항) (‘21.9.30. 개정)
마.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해체허가대상 건축물 (다만, 제1항제1호 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의 시 기존 건축물의 해체에 관한 심의를 포함하여 받은 경우는 제외)

○ **국토안전관리원의 해체계획서 검토 대상** (법 제30조 8항, 영제21조 5항)

- 특수구조 건축물 / 10톤 이상의 장비 탑재하여 해체 / 폭파 해체 건축물

※ 일반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검토 (해체허가·신고시)

○ **해체계획서의 작성(검토) 대상** (법 제30조 4항, 5항)

- 허가대상 : 전문가가 해체계획서를 작성

- 신고대상 : 전문가가 해체계획서를 검토 ※ 작성자 자격기준은 없음

※ 전문가범위 :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 신고한 자로서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안전을 직무범위로 등록한 자

○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법 제31조 3항, 서울시 방침)

- 상주감리 (허가권자가 명부에서 무작위 지정하여 건축주에게 통보)

▷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 해체신고 대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영 제21조 5항 각호의 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나목 또는 다목),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 유동인구가 많거나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 등 허가권자가 해체작업의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비상주감리 (명부에서 지정 필요, 지정방식은 허가권자에게 문의)

▷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로서 상주감리 대상이 아닌 경우

1.2. 관련 법규

■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세부 내용
「건축물관리법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자격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제3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체작업순서, 해체공법 등 해체계획서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2. 현장의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추락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3. 해체 후 부지정리,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 4.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확인 ②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3조제항 각 호의 자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 시행령 제8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 제5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3. 인·허가기관의 장이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점검을 요청하는 건설공사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8조(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1조(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사공 또는 해체에 따른 유해·위험의 방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8조(안전조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p>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	<p>• 제8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p> <p>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해체 감리업무 절차도	해체공사 안전점검 절차도
<pre> graph TD A[허가권자 → 관리자 • 감리자 지정] --> B[감리자 • 해체계획서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B --> C[감리자 → 허가권자 • 안전확보가 안된 경우 안전확보를 위하여 해체작업 시정 또는 중지 요청] B --> D[감리자 → 허가권자 • 해체작업 시정 또는 중지요청 보고서 제출] C --> E[관리자 → 허가권자 • 개선계획 수립 및 제출] D --> F[허가권자 → 관리자 • 해체공사작업 중지명령] E --> G[허가권자 → 관리자 • 개선계획 승인] F --> H[감리자 → 관리자 • 해체공사 완료보고서 제출] </pre>	<pre> graph TD A[사전조사 • 준공연도,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등 • 층층, 개축, 보강, 화재 등의 이력 • 기존자료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등 수행] --> B[주변환경조사 • 인접 건축물 조사 • 지반 및 동행 조사 • 기반시설량 조사 (전력, 가스, 수도, 평통신 케이블 등)] B --> C[가설구조물 및 건축물 외관조사 • 공사를 가설렌스 및 보행자통로 확인 • 외부비계 설치 확인 • CCTV 설치 확인] C --> D[구조안전성 확인 (장비 탑재에 의한 해체) • 해체 순서 • 책서모드 배치 확인 • 장비 용량 및 동선 확인 • 슬래브 위 해체장비를 존치 여부(30cm 이하)] C --> E[구조안전성 확인 (장비 탑재없는 외부해체) • 해체 순서 • 해체장비 확인] D --> F[안전대책 및 잔재물 처리 • 작업자 및 인접건물에 대한 안전대책 준수 여부 • 소음, 진동관리법 준수 여부 • 분진에 따른 살수, 방진 대책 실시 여부 • 잔재물 반출 처리 계획 유무] </pre>
해체공사 신고 절차도	해체공사 허가 절차도
<pre> graph TD A[해체 계획서 작성 • 건축물 해체 공사에 필요한 해체 계획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 • 시공, 안전, 품질, 환경 등의 모든 분야를 포함] --> B[구조도면 유/무 확인] B --> C[현장조사 실시 • 현장조사 계획 수립 • 현장조사 (외관조사 및 재료시험) • 실측도면 작성 • 상태평가 (기울기, 내하력, 내구성)] C --> D[해체 심의위원회 개최 • 서울시 건축조례에 의거하여 해체 심의위원회 개최 (지상 5층 또는 높이 13미터 이상이거나 지하2층 또는 깊이 5미터 이상인 기존 건축물의 철거 시)] D --> E[해체 신고서 제출 • 건축물 해체허가신고서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 제출 • 제출서류로는 해체공사계획서, 기관석면조사결과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대상건축물에 한함) 등이 있다.] E --> F[해체신고증 발급 • 허가권자는 해체계획서를 제출받아 최종 검토 후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 또는 불허가 사실을 통지] </pre>	<pre> graph TD A[해체 계획서 작성 • 건축물 해체 공사에 필요한 해체 계획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 • 시공, 안전, 품질, 환경 등의 모든 분야를 포함] --> B[구조도면 유/무 확인] B --> C[전문가 검토 • 「건축사업」 제23조 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 「기술사업」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 안전진단전문기관] C --> D[해체 심의위원회 개최 • 서울시 건축조례에 의거하여 해체 심의위원회 개최 (지상 5층 또는 높이 13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2층 또는 깊이 5미터 이상인 기존 건축물의 철거 시)] D --> E[해체 허가신청서 제출 • 건축물 해체허가신청서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 제출 • 제출서류로는 해체공사계획서, 기관석면조사결과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대상건축물에 한함) 등] E --> F[해체허가증 발급 • 허가권자는 해체계획서를 제출받아 최종 검토 후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 또는 불허가 사실을 통지] </pre>

1.3. 해체 심의 의결사항 [공통사항]

1. 버스정류장 연접 해체공사장 및 학교 50m 이내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강화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해주시고 현장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 버스정류장 연접 해체공사장, 학교50M이내 해체공사장(교육시설 안전성 평가대상)
2. 해체 시공 전 착공신고 의무화
➡ 착공신고 접수 시 자체 안전점검(시공자, 감리자) 및 건축안전센터 안전점검(시공자, 감리자, 건축안전센터) 결과를 함께 제출하시고, 현장배치 건설기술인 제출, 해체공사 계약서 및 감리계약서를 착공 신고 시 제출바랍니다.
3. 해체공사장 CCTV 설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CCTV 설치 계획(실시간 관제 방안 포함)을 제출하시고, 해체 완료신고 시 저장파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1] 심의 조건 참조
4. 우리구 해체공사장 집중안전점검 신청/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완료보고서 제출
5. 해체공사 예고제 및 안내판 부착 의무화 (A1 SIZE)
➡ 시민들이 해체공사를 사전에 인지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해체공사 사전예고의무화.
➡ 공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공사 관련자 및 공무원 연락처를 포함하는 대형 안내판을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허가 전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대상여부를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7. 해체공사장 도로경계부에는 강재 가설울타리 및 낙하물 방지망 설치
➡ 해체공사장의 도로경계부 등에 안전한 강재 가설울타리(EGI웁스)를 설치할 것
➡ 해체건축물이 보행로에 인접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PVC1500d이상)을 설치할 것
8. 해체공사 현장대리인의 상주를 의무화하여 시행바랍니다.
9. 해체 허가 신청시 우리구 해체공사장 안전관리기준에 맞추어 해체계획서가 작성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보완 완료 후 허가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홈페이지 검색창 "해체공사장 안전관리기준"검색)
➡ 구조 검토서 제출 대상여부 확인
➡ 우리구 집중안전점검 전 구조체(폐기물 투하구 등) 해체 금지
➡ 가림막, 가설울타리, 현황 배치도 및 종횡단면도 등 기준 반영
10. 심의 의결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항목별로 작성하여 확인(심의위원)받고 의결사항이 최종 반영된 해체계획서 및 구조검토서 등을 해체허가(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 할 것
(의결사항의 미이행 사항 대해서는 심의담당 주무관에게 확인 받고 조치결과보고서 작성)
11. 해체 허가 신청 전, 대상 위험공종에 해당하는 경우 해체계획서 상 사전작업허가제 계획을 명기하여 감리자의 검토승인을 받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해체 완료신고 시, 위험공종 사전작업허가서를 포함한 감리보고서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심의 조건 참조
12.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의 경우 해체 허가 전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기관 지정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 받을 것
13. 해체건축물의 석면조사결과서에 따른 석면해체계획을 해체 허가 신청 시 포함하여 제출
14. 해체계획서 작성 확인서를 제출 할 것(서울시 해체공사장 총괄운영지침 첨부파일 참조)

1.4. 강남구 해체공사장 세부 안전관리기준

해체공사장 세부 안전관리기준 VER2(2021.09)

가림막 및 가설비계 설치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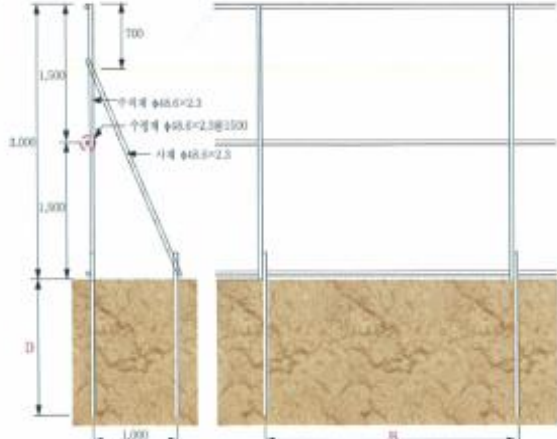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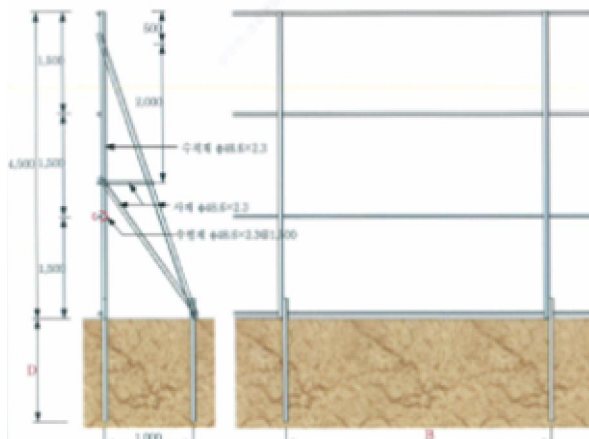
구분	12m 이상 도로변 모든 해체공사장 또는 5층 이상 건축물 해체공사장	12m 미만 도로변 해체공사장 또는 5층 미만 건축물 해체공사장
시공 사례		
가림 막	항공마대 1겹(내측) + 소음저감형판넬(외측) (소음저감형판넬 예시:매직판넬 등)	항공마대 2겹(내측안쪽) + 방진막 1겹(내측바깥) (PVC 1500D 이상)
비계 구조	시스템 비계	쌍줄비계
비계 설치 기준	시스템 비계 구조계산서 및 설치계획도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줄비계 기둥설치간격 - 내측 비계 기둥간격 : @750 - 외측 비계 기둥간격 : @1500 - 해체건축물과 비계 이격거리 : 12000이내 - 하부 밀등잡이 설치 (H=300 이내 설치) - 가새 설치 (10m이상 마다) - 코너 사보강 - 벽연결철물 설치간격 5mx5m(수직x수평)

가설울타리 설치기준

- 해체공사장 인접 대지경계부에 설치

구분	12m 이상 도로변	12m 미만 도로변
설치높이	높이 6m이상	높이 4m이상
재료	강재울타리 설치 (EGI패널)	
진출입로	진출입로 설치가 불가능 한 경우 이동식 안전웬스(높이2m이상) 설치	

- 강재 가설울타리(E.G.I 펜스) 하부 고정 설치방법(원형강관-SPS400)


높이 : 4m		높이 : 6m	
간격(B)	기초깊이(D)	간격(B)	기초깊이(D)
0.75m이하	1.5m이상	0.75m이하	2m이상
			

이동식 안전휰스 설치기준

- 가림막 및 가설울타리 설치가 현장 여건상에 불가한 해체공사장 진·출입구에 설치 (H=2m이상)
- 지상에서 대형장비로 해체 시 해체 장비 주변 및 폐기물 낙하 위험 부분에 설치

구분	내 용	
목적	지상에서 장비 해체시 보행자 보호	장비 진출입로에 가설울타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사진		

낙하물 방지망 설치 기준

구분	내 용	
기준	설치조건	참고사진
	<p>1. 해체건축물이 보행로에 인접해 있는 경우</p> <p>2. 인접한 건축물의 출입 동선에 해체건축물이 인접해 있는 경우</p>	 <p>재질 : PVC1500D 이상</p>

CCTV 설치 기준

- 해체계획서 작성 시 CCTV 설치계획 제출 및 해체 완료 신고 시 영상파일 제출(USB 제출)
- 해체 행위 및 인접 도로 변 보행로 부분을 녹화하는 목적으로 적절한 위치에 설치

구분	내 용
대상	- 모든 해체공사장 적용
내용	- 심의 및 허가대상 : 실시간 관제 실시 및 해체의 모든 과정을 녹화 및 저장 (4개소 이상) - 신고대상 : 해체의 모든 과정을 녹화 및 저장 (2개소 이상)
자료 제출	- 해체 완료 신고 시 인허가 담당에게 영상파일 제출(USB제출)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 작성 기준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 13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구분	내 용
장비를 탑재하여 해체하는 경우	<div>대상</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크레인이 구조물(슬래브)위에서 인양 및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2. 1톤 이상의 해체장비(포크레인)가 구조물(슬래브)위에서 해체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div>내용</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체장비의 층간 이동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계획 (램프구간 설정 및 하부 잭서포트 보강 or 크레인 이용) 2. 잭서포트 설치간격 명시 (현장에서 설치 및 점검 할 수 있도록 치수 명시) 3. 폐기를 투하구 위치 명시 (현장에서 설치 및 점검 할 수 있도록 치수 명시) ※구청에서 실시하는 집중안전점검 실시 전 슬래브 오픈금지 4. 장비 작업 가능구간 명시 (현장에서 설치 및 점검 할 수 있도록 치수 명시)
지하1층의 구조물 해체관련 (1층바닥 구조체 해체관련)	<div>대상</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상에서 저층부를 해체하는 경우(지하1층 규모이고 깊이가 2M이상일 경우) → 대형장비가 1층 바닥을 열어 지하바닥에 폐기물을 쌓고 밟으면서 전진하는 경우 ※ 10톤 이상의 장비가 1층 슬래브 위에 탈 경우에는 국토안전기술원 검토대상 <div>내용</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층 바닥 슬래브 및 보 존치구간에 대한 구조 전문가 검토 필요 → 장비 진입구간에 따라 오픈구간 구조검토
지하2층 이상의 구조물 해체관련	<div>대상</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하2층 이상의 구조물을 해체할 경우 구조전문가 검토 필요 <div>내용</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체공법 및 순서에 따른 구조물 보강방법 제시 1층 바닥(슬래브)위 흙막이를 위한 장비 탑재 시 관련 하중에 따른 잭서포트 보강
지상에서 대형장비로해체시	<div>대상</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3층 이상의 구조물 철거 시 2. 대형장비를 이용하여 5층 이상의 건축물을 지상에서 해체 하는 경우 → 구조별(조적조/벽식/라멘조) 해체 순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 <div>내용</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체 방법 및 순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 (평면도 및 단면도에 해체순서표기)
가설비계 설치관련	<div>대상</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계의 높이가 31m이상일 경우 2. 6m이상의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

※ 폐기를 투하구 위치, 잭서포트 위치, 장비작업구간, 램프설치 구간 등에 대한 표기는 치수로 명시하여 현장에서 확인이 용이하도록 도면에 표현 하고 해체 장비기사나 작업 반장 등에 공유 및 전달 할 것

가설구조물 설계도서 제출 의무화

- 행정2부시장 방침 제333호 (지역건축안전센터-14749, 2020.12.24.)

구분	내 용
작성 대상	1. 가설울타리 설치 현장 2. 가설비게 설치 현장
내용	1. 가설비게 = 설치 평면도, 입면도, 상세도 2. 가설울타리 = 설치 상세도 (별도첨부-강관비게 하부 인입길이 설치기준)

- ※ 현장에 맞추어 가설구조물 설계 도서를 작성을 해야 함
- ※ 가설구조물 높이가 31M이상일 경우 설계도서에 따른 구조검토 필요
- ※ 가설구조물 설계도서에 따라 작업자들이 현장에서 도면대로 설치하기 위함

해체건축물 배치도 및 종·횡 단면도 작성 표준화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기준”에 고시되어 있고 “해체감리자 검토확인서” 제출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체건축물 배치도 및 종횡단면도 등의 내용이 미비하여 해당 내용들에 관한 작성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해체계획서 작성 시 건축물 현황도(배치도, 종횡단면도) 포함하여 제출**

	내용	예시
배치도	1.인접 건축물 및 대지 내 건축물 현황 및 이격거리 2.인접 건축물 및 대지 내 레벨표현 3.대지 내 지하층 구조물현황 3.옹벽, 사면, 담장 등 4.고압선 현황 등 5.가림막 설치계획 (해체건축물 주변, 높이표현) 6.가설울타리 설치계획 (대지경계선, 높이표현) 7.이동식 안전휰스 설치계획 (임시 출입구) 8.해체공사 안내표지판 위치 및 CCTV설치 위치 9.크레인 및 장비 작업 위치	
종 횡 단 면 도	1.인접건축물과의 이격거리 2.인접건축물 및 해체대상 건축물의 지상/지하층 현황 포함 3.가설비게 설치계획 포함 4.가설울타리 설치계획 포함	

인접 고압선 현황 및 전선보호관 설치계획 작성 의무화

- 해체계획서 작성시 해당 계획 포함하여 제출

해체 안전점검신청서 및 사전점검서류 제출 의무화

- 신고/허가 신청시 해체감리자 및 검토자에게 해당서류 제출 안내

해체 심의 의결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근거자료 제출 의무화

- 조건부 허가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관련근거자료 제출 및 해체계획서에 반영

버스정류장 인접 해체공사장 및 학교 50m 이내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강화

- 건축물 주변조사, 구조안전계획(전도 및 붕괴방지 대책), 인접건축물 안전관리, 통행·보행자 안전관리
- 학교50m이내 위치한 해체공사장 -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대상

해체계획서 품질 표준화(해체계획서 작성 목록 기준)

근거법령) 01.건축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02.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2

0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58조 04.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 ① **해체공사장 개요**
- ② **현황도면 (배치도 및 단면도는 인접 건축물까지 포함하여 작성-해체건축물과의 이격거리, 높이, 깊이 등)**
 - 1)배치도 2)평면도 3)단면도
- ③ **사전검토 및 협의 사항**
 - 1) 학교주변(50m이내) 2)버스정류소 인접 3)국토안전관리원 검토의뢰 대상 여부 확인(건축물관리법 30조)
- ④ **해체공사 주요 공정 순서 계획**
 - 1)가시시설 설치 2)구조보강(장비탑재보강, 지하토압보강, 수직이동보강) 3)고층부 해체 4)저층부 해체 5)지하구조물 해체 6)주변환경정리
- ⑤ **가시시설 설치 계획 배치도**
 - 1)가설울타리 2)가설비게 3)가림막 4)진출입도어 5)CCTV 6)인접건축물 7)대지경계선 표현 8)낙하물 방지망
- ⑥ **가시시설 설치 계획 단면도**
 - 1)종단면도 2)횡단면도
- ⑦ **가설비게 설치 계획도 (가설비게, 가설울타리 등)**
 - 1)평면도 2)입면도 3)부분상세도
- ⑧ **가설비게 구조계산서**
- ⑨ **구조보강계획(구조체 위에 장비 탑재시, 지하 내부 구조를 철거 시 지하토압관련 존치/보강 부분 검토)**
 - 1)잭서포트 설치계획 2)폐기물투하구 위치검토 3)장비수직이동구간 하부보강 4)지하토압관련 보강
- ⑩ **고층부 해체계획(장비를 구조체위에 탑재하여 해체하는 경우)**
 - 1)해체계획 평면도 2)장비이동가능구간 3)탑재 장비 제원표 4)장비수직이동 계획 5)단면검토(기준층, 복층, 옥탑의 층고 vs 탑재장비작업 작업가능 높이) 6) 장비작업시 유의사항
- ⑪ **저층부 해체계획(대형장비로 저층부를 한꺼번에 해체하는 경우, 지하층 규모가 1층인 경우)**
 - 1)지하 토압관련 1층 바닥 OPEN 가능 구간 구조 확인 (지하1층이고 깊이2m이상 일 경우에만 해당)
 - 2)해체 계획 평면도(구조형식에 따른 해체순서 명시-해체모듈계획)
 - 3)해체 계획 단면도

예시1: 대지 내 폐기물 쌓기 위한 공간(마당)이 있는 경우
(3층 슬래브,보,기둥 해체)→폐기물 마당에 적재(2층 슬래브,보,기둥 철거)→폐기물 마당에 적재→
(1층 슬래브,보,기둥 철거)→폐기물 마당에 적재→1층 바닥슬래브 오픈→지하층 되메우기→대형장비 전진하여 반복작업

예시2:대지 내 폐기물 쌓기 위한 공간(마당)이 없는 경우
(비구조체 외벽 1,2,3층 철거)→(폐기물 투하용 슬래브 1,2,3층 해체)→(3층 슬래브,보,기둥 해체)
→(2층 슬래브,보,기둥 해체)→(1층 슬래브,보,기둥 해체)→대형장비 전진하여 해체작업
- ⑫ **지하 구조물 해체계획 (지하2층 이상의 구조물 해체)**
 - 1)지하구조보강 계획(지하구조체 해체전) 2)해체 평면계획도 (모듈별 해체순서 계획) 3) 해체 단면계획도 4)장비이동계획 5)흙막이 보강계획 6)잔존 지하구조물 해체계획
- ⑬ **해체 후 현장 안전관리**
 - 1)해체 완료 후 가설울타리 설치 계획 2)대지경계부분의 단차 발생시 추락방지 계획 3)폭우 및 강풍대비 비상연락망 등계획
- ⑭ **기타 안전조치**
 - 1)CCTV 설치 계획 2)해체공사 예고제 및 안내판 부착 계획 3)도로변 낙하물 방지망 설치계획

※ 해체 신고/허가 대상 모두 적용 하며 파란색 항목은 (③,⑧~⑫) 해체 규모 등 현장상황에 맞게 목록을 가감 하여 해체계획서 작성 할 것

-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세부실행계획(강남구)
- 해체공사장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 추진계획(강남구)
- 해체공사장 세부 안전관리기준(강남구)
-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지침(서울시)
-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서울시)
-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서식(국토부)
-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등에 관한 기준(행정규칙)

II. 중 · 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1.1. 일반사항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에서의 빈번한 안전사고의 발생으로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맞춰 ‘말로 하는 안전보다 실천 하는 안전’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건설현장 끝선 근로자까지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이 충실히 이행 및 실천되어야 함.

■ 목 적

-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은 중·소형 공사장에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전체적으로 확대하고 위험공종 위주로 내용을 보강하여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 서울시 확대 수립대상

- 지하 5m 이상 굴착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연면적 200㎡ 초과하는 건축물, 공동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및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가운데 학교, 병원 등

※ 기존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미만 중·소형 건축물 중에서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기존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등)

※ 이외의 수립대상은 해당 시행령 제98조1항 확인

1.2. 관련 법규

■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세부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2조의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

(국토교통부)」	<p>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 시행령 제101조의5(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p> <p>① 법 제6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u>소규모안전관리계획</u>(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설 공사로서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한다.</p> <p>1.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p> <p>2.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p> <p>②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결과는 작성 조건부 작성 부적정으로 구분한다.</p> <p>• 시행령 제101조의6(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p> <p>①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u>소규모안전관리계획</u>의 수립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건설공사의 개요</p> <p>2. 비계 설치계획</p> <p>3. 안전시설물 설치계획</p>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p>•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 [시행일 (2022. 8. 18.)]</p> <p>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p> <p>-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이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p> <p>• 시행령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p> <p>-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p>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p>• 제14조(착공신고등)</p> <p>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⑥ 건축주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에 해당 건축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의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p>

1.3.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

■ 목적

- 2021년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감찰」 및 사고사례 전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으로 여전히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해체건물 붕괴사고 등 공사장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선제대응하기 위함
- 중·소형 건축공사장에서의 빈번한 안전사고 발생으로 민간건축공사장에 대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충실히 이행되고 실천되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실태 확인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 자치구·현장 이행 5개 항목					
건축허가	사각지대 개선	① 소규모 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강화)			
시공/감리	예방지도 관리감독 · 안전관리 기반마련	② 사용승인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결과 제출 의무화			
		③ 사전작업허가제 민간 건축공사장 확대 도입			
		④ 착공전 안전교육 의무화			
		⑤ 취약공종 CCTV 설치 의무화			

- 각 항목별 세부내용(※주택건축본부장 방침('19.11.1.) 및 행정2부시장 방침('18.7.9.))

① 소규모 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 I.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와 동일)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연면적 200㎡ 초과, 지하 5m 이상 굴착하는 건축공사로 확대하여 착공 전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후 감리자 검토 및 승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의무화

② 사용승인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결과 제출 의무화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는 건축공사 착공신고시 계약서 사본 제출, 사용승인시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사본 및 예방지도 개선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③ 사전작업허가제 민간 건축공사장 확대 도입 (※ I.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와 동일)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에 위험공종(2m 이상 고소작업 등)에 대한 감리자 사전작업허가제 실시계획을 포함하고 사용승인시 감리보고서에 이행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 감리자는 위험공종 사전작업 점검 7일전 허가권자에게 일정을 통보하도록 의무화(건축허가 조건부여)

④ 착공전 안전교육 의무화

- 시공사(현장대리인), 감리자(배치감리원) 및 건축주에 대하여 착공전 안전교육 이수(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교육 시행) 후 교육필증을 첨부하여 착공신고를 진행하고, 허가권자는 교육필증 확인 후 착공신고를 처리하도록 의무화

⑤ 취약공종 CCTV 설치 의무화 (※ I.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와 동일)

- 착공신고시 취약공종(해체, 굴토, 기초)에 대한 CCTV 설치(최소 4개소)를 계획하고, 사용승인시 저장파일을 제출하도록 의무화

■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세부실행계획 수립」

- 「서울시 중·소형 공사장 안전관리 실행 강화 대책」 마련에 따른 우리 구 세부실행 계획 수립

《 강남구 세부실행 계획 》

연 번	구분	적용 대상	주요 내용
1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 지하 5m 이상 굴착 - 종합건설업자 시공 건축 공사(연면적 200㎡ 이상)	공사개요, 안전관리조직, 안전 점검 및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위험공종 목록, 감리 사전 작업 허가제 대상 주요 항목 및 시기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2	건설산업재해 예방지도 점검 강화	공사비 1억원 이상	사용승인시 완료증명서 제출
3	사전작업허가제 시행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 해체 허가	2m 이상 고소작업 등 위험공종 시 감리에게 사전작업허가 승인 후 시행
4	착공 전 안전교육 의무화	모든 건축공사장	건축주, 감리자, 시공사 대상으로 안전교육시행(교육 필증 배부)
5	취약공종 CCTV 설치 의무화	해체 및 굴토 심의 대상	위험공종(해체, 착공~1층 슬래브 구조체) 시 CCTV 설치

Ⅲ. 안전관리계획 수립 · 검토 · 심사 및 정기안전점검

1.1. 일반사항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공사 진행 중인 민간 건축공사장들 중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 현장 감찰 등을 통하여 안전관리계획 업무실행을 확인한 결과 ① 안전관리 계획 수립·검토·심사 부적정 및 ② 정기안전점검 미실시·미제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에 따라 공사장의 효율적인 안전 관리 활동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 목 적

- 건설공사장에서의 ① 안전관리계획 수립·검토·심사(승인) 부적정 및 ② 정기안전점검 미실시·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공사 목적물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함

■ 안전관리계획 수립·검토·심사(승인) 업무 처리 부적정

- 안전관리계획 수립·검토·심사(승인) 업무 처리 절차
 - ① 시공자는 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후 감리자에게 제출
 - ②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을 검토 및 확인
 - ③ 시공자는 감리자의 검토 및 확인이 끝난 안전관리계획을 ‘건설공사 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를 통해 허가권자에게 제출
 - ④ 허가권자는 안전진단기관에 검토 의뢰
 - ⑤ 허가권자는 20일 이내 검토결과 판정 후 시공자에게 승인서 발급
- 안전관리계획 수립·검토·심사(승인) 부적정 사례
 -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였으나 미제출, 감리자 검토 및 확인 소홀,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부적정, 시공사 셀프 검토 의뢰, 안전진단기관 검토 미실시, 안전관리계획 보완사항 미조치, 승인서 미발급(착공신고로 갈음) 등 전반적으로 부적정
 - 따라서 시공단계의 위험요소 조사 및 예방대책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효율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하지 못할 우려가 발생

항목	부적정 사례	세부내용	해당 공사장	주체	비고
①	미수립/미제출	시공사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또는 수립하고서도 미제출	8개소 (4%)	시공사	고발
②	감리자 검토·확인 소홀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한 감리자 검토·확인 미 실시	119개소 (57%)	감리자	벌점
③	제출시기 부적정	착공 전이 아닌 착공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거나 착공신고 후 제출	187개소 (89%)	시공사	-
④	검토의뢰 주체 부적정 (시공사 셀프 의뢰)	허가권자가 안전진단기관에 검토의뢰하지 않고 시공자가 직접 안전진단기관에 셀프 검토의뢰 후 검토의견서 첨부하여 착공신고서 제출	101개소 (48%)	허가권자	-
⑤	안전진단기관 검토 미 실시	허가권자가 안전진단기관에 검토의뢰 미 실시 (안전진단기관 검토의견서 없음)	22개소 (10%)	허가권자	-
⑥	보완사항 미조치 (조건부 적정 미보완)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7개 항목)이 부실하게 작성되거나 ‘조건부 적정’ 내용에 대한 별도의 보완없이 공사 진행	12개소 (6%)	허가권자 시공사	-
⑦	허가권자 승인서 미발급 (착공신고 처리로 같음)	허가권자가 안전관리계획의 심사결과(적정,조건부적정,부적정) 승인서를 시공사에게 별도 발급하지 않고 착공신고 처리로 같음	92개소 (44%)	허가권자	-

구분	점검현장	①번 항목	②번 항목	③번 항목	④번 항목	⑤번 항목	⑥번 항목	⑦번 항목
00구	68	4	37	49	40	10	2	33
000구	61	2	27	59	18	5	2	33
000구	13	1	11	12	6	1	-	8
0000구	22	1	14	21	3	4	3	7
0000구	46	-	30	46	34	2	5	11

■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미 실시 및 점검결과 미제출

○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점검 결과 제출 업무 처리 절차

- ① 시 공 자 는 안 전 관 리 계 획 에 따 라 건 설 공 사 의 공 사 기 간 동 안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실시
- ② 시공자는 공사 준공 시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 ③ 안전점검을 시행한 안전진단기관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안전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해당 허가권자 및 시공사에게 통보
- ④ 감리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안전점검 실시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지도 및 감독

○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통보 부적정 사례

- 안전감찰 결과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고, 또 안전진단기관의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허가권자 등에게 미제출한 사례 적발
- 이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안전 및 시공·품질 상태가 불량할 우려가 있음

구분	점검현장	정기안전점검 실시 여부(시공사)				정기안전점검 결과 제출 여부			비고
		계	실시	미실시	미도래	대상	제출	미제출	
○○구	68	19	19	39	10	19	12	7	
○○○구	61	60	25	35	1	25	21	4	
○○구	13	13	4	9	-	4	-	4	
○○○구	22	21	12	9	1	12	1	11	
○○○구	46	45	19	26	1	19	6	13	

1.2. 관련 법규

■ 4-① . 안전관리계획 수립 · 검토 · 심사와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세부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권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시행령 제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진동·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과 굴착공사로 인한 위험장후 감지를 위한 계측계획을 포함한다)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 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4-②. 정기안전점검 미 실시 및 점검결과 미제출과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세부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4-1. 안전관리계획 수립·검토·심사 관련 법령과 동일) •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해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의뢰받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이하 "건설안전점검기관"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다만, 그 기관이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인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2. 국토안전관리원 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지정하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의뢰해야 한다 . 이 경우 그 건설공사를 발주·설계·시공·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서는 안 된다. ④ 안전점검을 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안전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 해당 인·허가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점검 결과를 통보 받은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위임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참여자의 안전관리 체계, 역할 및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건설공사 안전점검 실시 및 종합 보고서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과 안전점검 비용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적절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하며,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실시하여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p>• 제2조(정의)</p> <p>-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 참여자"란 건설공사의 계획에서부터 준공까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자,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말한다. 6. "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또는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 또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를 말한다. 7. "건설안전점검기관"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9. "안전관리계획서"란 법 제62조에 따라 수립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말한다. 10. "안전관리비"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1. "안전점검"이란 영 제100조에 따른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말한다.
<p>「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 (국토교통부)」</p>	<p>•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p>• 제19조(공사감리) [※ [시행일 (2022. 2.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나.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대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법 제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란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를 말한다.

1.3. 안전관리계획 수립·검토·심사 및 정기안전점검 강화대책

■ 목적

- 4-①. 안전관리계획을 미수립 등 관련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공사장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사장의 위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제대로 안내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 4-②. 정기안전점검 미 실시 등 공사장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사장의 위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이를 제대로 안내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공사관계자에 대한 엄정한 처분

- 4-①. 안전관리계획 수립 위반

위반내용	공사관계자 처분내용			처분근거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미수립/미제출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벌점 3점	건진법 제88조, 동법시행령 제87조[별표8]
승인 없이 착공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건진법 제89조
검토·확인 미 실시	-	-	벌점 3점	건진법 시행령 제87조[별표8]
승인 없이 착공 묵인	300만원 이하 과태료	-	-	건진법 제91조 제3항 제13호

- 4-②. 정기안전점검 실시 위반

위반내용	공사관계자 처분내용			처분근거
	시공자	감리자	건설안전점검기관	
정기안전점검 미 실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벌점 3점	-	건진법 제88조, 동법시행령 제87조[별표8]
	벌점 3점			
안전점검 결과 미 보고	-	-	벌점 1점	건진법 시행령 제87조[별표8]

IV.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 일반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공사를 대상으로 건축주가 시공자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금액 및 종류에 따라 계상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공사도급 계약서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

■ 목 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계획서 작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계획서는 발주자, 공사종류, 공사금액,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대상 금액, 항목별 실행 계획 및 금액, 비율 등의 항목으로 구성
- 공사에 대한 일반사항 및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항목별로 금액 및 비율 등의 실행계획을 기입
- 일반사항의 대상금액을 바탕에 두고, 항목별 실행계획에서 어떤 항목에 얼마만큼의 금액과 비율로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

※ 공사종류 및 규모별(금액)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

구분 공사종류	대상액 5억원 미만 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비율%	영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적용 비율%
		적용비율%	기준액(원)		
일반건설공사(갑)	2.93	1.86	5,349,000	1.97	2.15

※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서 상의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 계상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및 과소계상 부적정 현황

구분	점점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용 계상된 현장별 금액 적정여부 (건축과 자체 조사 / 시공사 구두 확인)		
		공사계약서 상 표시 여부		비용 계상여부(건축과 자체 조사)		대상	적정	과소 계상
		표시	미표시	계상	미계상			
○○구	133	-	133	124	9	124	78	46
○○○구	85	2	83	44	41	44	16	28
○○○구	45	3	42	17	28	17	16	1
○○○○구	47	-	47	2	45	2	2	-
○○○○○구	55	1	54	44	11	44	40	4

1.2. 관련 법규

■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세부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 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⑤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란 건설사업장과 제7조 제4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안전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건설사업장 소속근로자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 소속근로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건축법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건축관계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도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서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21조(착공신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제 25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⑤ 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⑥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V. 건축물 신축공사장 안전관리

1.1. 일반사항

2021년 전국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828명으로 전년대비 감소, 이중 건설업도 417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음. 이러한 '21년 사고사망자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60세 이상 고령자 및 외국인 사망자는 증가하였으며 떨어짐·끼임 등 재래형 사고가 여전히 절반 이상 발생하였음. 따라서 시공자는 공사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 등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 목 적

-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
- 공사관계자(시공자 및 감리자)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안전관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 부적정 현황

(단위: 개소 / 건)

구분	점검현장 (개소)	지적현장 (개소)	안전관리 부적정 사례				
			소계(건)	안전가시설 등	화재·폭발예방	가설전기	기타
○○구	28	27	122	86	15	8	13
○○○구	23	22	91	63	12	5	11
○○구	23	23	110	63	11	6	30
○○○구	23	22	116	69	10	12	25
○○○구	24	24	140	100	9	8	23

※ 안전가시설은 건설공사의 다양한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로 비계, 동바리, 가설통로(경사로, 사다리, 승강용 트랩 등), 추락방호망 또는 낙하물방지망, 방호선반, 안전난간, 작업발판, 안전웬스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1.2. 관련 법규

■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세부 내용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p>• 제24조(건축시공)</p> <p>① 공사시공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계약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하여야 한다</p> <p>② 공사시공자는 건축물(건축하거나 용도변경허가 대상인 것만 해당된다)의 공사현장에</p>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③ 공사시공자는 설계도서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설계자에게 설계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공사시공자는 공사를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을 받으면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공사를 하여야 한다

•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28조(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 ①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87조(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 [시행일 (2022. 1. 1.)]

- ① 시·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 [시행일 (2022. 2. 11.)]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
 - 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 나.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 2.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건축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대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 (국토교통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2조의2(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건설기술인은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공사관리 등과 관련한 요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 또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사용자의 소속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사항을 건설기술인에게 요구해서는 아니 되며 건설기술인은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유를 밝히고 그 요구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 또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그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발주청은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8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 제5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2.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3. 인·허가기관의 장이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점검을 요청하는 건설공사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발주청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p>「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8조(안전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p>「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국토교통부)」</p>	<p>•제1장 일반 사항</p> <p>1.1 목적</p> <p>- 이 기준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감리자가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1.2 적용범위</p> <p>- 이 기준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가 「건축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건축법」, 「건축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p>
--------------------------------------	--

1.3. 안전관리 강화대책

■ 목적

- 공사관계자의 관심 소홀 및 작업편의 등의 사유로 대부분의 공사장에서 안전가시설 설치 부적정, 화재·폭발사고 예방 소홀, 가설전기 방호조치 소홀 및 기타 안전관리 소홀 등의 사항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 5개의 자치구별 민간 건축공사장(신축) 안전관리 부적정 세부 내용

- 안전가시설(근로자 추락 및 낙하물 예방시설) 등 설치 부적정
 -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안전가시설(비계, 발판, 난간, 낙하물방지망 등)의 설치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
 - 안전난간 및 안전방망 미설치, 비계 작업발판 미설치 및 고정불량, 개구부 방호조치 불량, 비계 및 이음재 설치 불량, 낙하물방지망 미설치, 동바리 설치 불량, 안전휀스 미설치 등 안전가시설 설치 부적정 사례 적발
- 화재·폭발사고 예방시설 설치 부적정(위험물관리 및 임시소방시설)
 - 가스 등 위험물은 작업장 외 별도의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 및 용단을 하는 경우에는 폭발 또는 화재예방을 위한 방호조치(소화기, 불티 비산방지덮개)를 해야 함
 - 위험물(가스 등) 보관 불량, 위험물저장소 관리 소홀(미시건 등), 용접 작업반경 11m 내 가연성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티 비산 방지망과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고 작업,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등 화재·폭발사고 예방시설 설치 부적정 사례 적발

○ 가설전기 방호조치 부적정

- 전기 기계·기구 충전부는 근로자의 감전위험 방지를 위하여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막 혹은 절연 덮개로 설치 및 고정하여야 함
- 가설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가공매달기식 등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조치 후 사용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통로 바닥에 설치 및 사용해서는 안 됨
- 가설분점함 접지 불량 및 잠금장치 없이 방치, 물이 있는 바닥 등에 가설전선 방치, 건설용 콘센트(방호·방습)가 아닌 가정용 콘센트 사용 등 가설전기 부적정 사례 적발

○ 기타 안전관리 부적정(폭염대비 소홀, 공사자재 무단 적치 등)

- 근로자 보호대책(휴게실, 제빙기, 식염수 등) 소홀, 작업장 청결 소홀, 근로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고리 등) 미착용, 신호수 미배치, 도로 위 공사자재 무단적치, 건축허가표지판 미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타 안전관리 부적정 사례 적발

○ 결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 과정(착공~준공)에 걸쳐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규정 및 현장관리 철저

VI. 건축물 신축공사장 시공 관리

1.1. 일반사항

시공자는 안전 및 시공·품질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여야 하고,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 및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수시 시공과정에 입회하여 검사 및 확인 하는 등 공사장의 관리를 하여야 함.

■ 목 적

- 건설공사현장에서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건설 산업재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 민간 건축공사장의 시공관리 부적정 현황

(단위: 개소 / 건)

구분	점검현장 (개소)	지적현장 (개소)	시공관리 부적정 사례			
			소계(건)	흙막이 가시설	계측관리	건축시공
○○구	28	11	22	12	-	10
○○○구	23	3	5	3	1	1
○○구	23	4	5	-	-	5
○○○○구	23	16	20	6	-	14
○○○구	24	5	7	4	1	2

1.2. 관련 법규

■ 관련 법령 (※ 구체적인 법령 내용은 ‘Ⅴ. 건축물 신축공사장 안전관리와 동일’)

-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

1.3. 안전관리 강화대책

■ 목적

- 공사관계자의 관심소홀 및 작업편의 등의 사유로 지하 굴착 흙막이 가시설 부실시공 및 계측관리 부적정, 철근 배근 및 시공 부적정, 콘크리트 재료분리(철근노출) 방치 등의 사항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 5개의 자치구별 민간 건축공사장(신축) 시공관리 부적정 세부 내용

○ 지하 굴착 흙막이 가시설 시공 및 계측관리 부적정

- 시공자는 지하 굴착 공사시 지반의 붕괴에 의한 건설현장에서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흙막이 가시설 조립도를 작성 및 설치해야 함
- 정기적으로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등에 대한 점검 및 설계 도서에 따른 계측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필요한 경우 보강 조치 해야 함
- 흙막이 공법 임의 변경, 흙막이 조립도와 다르게 부설시공, 계측관리 부적정 등 지하 굴착공사 안전기준 위반사례가 적발됨

○ 건축시공 부적정(재료분리, 철근배근, 단열재 등)

- 콘크리트의 재료분리(철근노출) 방치, 철근 배근 및 시공 부적정, 단열재 훼손 및 부실 설치 등의 건축시공 부적정 사례 적발

○ 결론

- 건설공사현장에서의 안전사고와 부설시공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자와 감리자는 시공의 전 과정에 있어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Ⅶ. 건축물 신축공사장 품질 관리

1.1. 일반사항

민간 건축공사장에서 공사관계자의 관심소홀 및 작업편의 등의 사유로 품질관리자 미배치, 품질시험실 및 시험·검사 장비 미확보, 콘크리트 타설 계획 미수립, 레미콘 품질시험 미실시 및 도착·타설완료 시간 기록·관리 미실시 등의 공사현장의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공사현장에서 철저한 품질관리를 이행하여 산업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임.

■ 목 적

- 건설공사현장에서의 적절하지 못한 품질관리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 민간 건축공사장의 품질관리 부적정 현황

(단위: 개소 / 건)

구분	점검현장 (개소)	지적현장 (개소)	품질관리 부적정 사례					
			소계(건)	품질관리자	품질시험실	콘크리트 타설계획	레미콘 품질시험	레미콘 기록·관리
○○구	28	21	65	6	18	11	15	15
○○○구	23	19	69	5	17	15	19	13
○○○구	23	15	51	-	15	12	13	11
○○○○구	23	20	77	-	20	19	20	18
○○○○구	24	22	78	1	22	16	22	17

1.2. 관련 법규

■ 관련 법령 (※ 구체적인 법령 내용은 ‘V. 건축물 신축공사장 안전관리’와 동일)

관련 법령	세부 내용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조(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공급업자,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레미콘 한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및 가설가재 품질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 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5조(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역할)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사공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별지 제4호 서식의 품질관리계획서 검토승인서에 따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품질관리계획서와 절차서 지침서 등 이에

	<p>수반된 문서를 검토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검토확인결과에 따라 시공자에게 시정 및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치를 요구받은 시공자는 이를 자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p> <p>④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자가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품질관리계획이 승인되기 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p> <p>• 제6조(시공자의 역할)</p> <p>① 시공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시공자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	---

1.3. 안전관리 강화대책

■ 목적

- 시공자는 공사장 시공 · 품질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시공을 하여야 하며,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수시로 시공과정에 입회하여 검사 및 확인하는 등 공사장의 시공 및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함

■ 5개의 자치구별 민간 건축공사장(신축) 품질관리 부적정 세부 내용

- 품질관리자 미배치 및 품질시험실 미확보
 - 시공자는 일정 규모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시험실 및 품질관리자 확보 등의 내용이 포함된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품질관리자는 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 · 검사장비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함

대상공사 구분	공사규모	시험·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인 (품질관리자)
특급 품질관리	1,000억원 이상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 장비	50㎡ 이상	특급·중급·초급 각 1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특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50㎡ 이상	고급·중급·초급 각 1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천㎡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건설공사		20㎡ 이상	중급·초급 각 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	중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20㎡ 이상	초급 1명 이상

○ 콘크리트 타설계획 미수립

- 시공자는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라서 콘크리트 타설 일시, 타설 물량, 타설 인원 및 소요장비 등이 포함된 콘크리트 타설 계획서를 수립 하여야 하고 이를 감리자의 검토를 받아야 함

○ 레미콘 품질시험 및 도착·타설 완료시간 기록·관리 소홀

- 시공자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및 굳은 콘크리트 등 현장반입 자재의 모든 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함
- 레미콘의 운반시간 준수는 레미콘 품질관리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콘크리트를 비비기 시작하여 외기 온도가 25℃ 이상의 경우에는 90분, 25℃ 미만일 경우에는 120분 이내에 콘크리트 치기를 완료하고 납품서(송장)에 도착 및 타설 완료시각을 기재하도록 규정해야 함

레미콘 품질시험 종목				레미콘 운반시간	레미콘 납품서(예시)
				<div> <div>레미콘 제조</div> <div>→</div> <div>레미콘 운반</div> <div>→</div> <div>공사현장 배출</div> <div>→</div> <div>폼포커 압송</div> <div>→</div> <div>구조체 부어넣기</div> </div> <div>(시공물 중요시)</div> <div>표준시방 - 25℃ 이상 : 1.5시간 / 25℃ 미만 : 2.0시간</div>	
종별	시험종목	시험빈도		기준값	비고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레미콘 포함)	슬럼프	◆ 배합이 다를 때마다		80mm 이상 → ±25	
	공기량	◆ 1일 타설량이 150㎥ 미만 : 1일 타설량마다		4.5% 이하(±1.5%)	
	염화물 함유량	◆ 1일 타설량이 150㎥ 이상 : 150㎥마다		0.3kg/㎥ 이하	
굳은 콘크리트 (레미콘 포함)	압축강도	◆ 7일 압축강도 : 1조 3개 공시체(평균 압축강도) ◆ 28일 압축강도 : 3조 9개 공시체(평균 압축강도)		7일 : 호칭강도 85% 이상 28일 : 호칭강도 85% 이상	

○ 결론

- 시공자와 품질관리자는 민간 건축공사장에서 건설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관리를 철저히 시행해야 함

Ⅶ. 건축물 신축공사장 공사 관리 · 감독

1.1. 일반사항

민간 건축공사현장에서 배치된 현장대리인 및 상주감리자 등이 개인적인 용무를 이유로 건설현장을 무단이탈하거나 신고 되지 않은 기술자를 배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공사 현장의 제반 사항을 책임진 '현장대리인'과 전체 공사기간 동안 시공·품질·안전 관리에 대해 기술지도 하여야 하는 '상주감리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해당 건설현장을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목 적

- 건설공사현장에서 현장대리인 및 상주감리자의 무단 이탈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 민간 건축공사장의 공사관리·감독 부적정 현황

(단위: 개소 / 건)

항목	위반사례	지적건수	㉠구	●●●구	○○구	○○○구	▣▣구
①	현장대리인 현장 무단 이탈	9	2	1	1	2	3
	현장대리인 변경신고 미이행	3	-		2		1
②	상주감리자 현장 무단 이탈	1	1				

1.2. 관련 법규

■ 관련 법령 (※ 구체적인 법령 내용은 'V. 건축물 신축공사장 안전관리' 와 동일)

관련 법령	세부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p>•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p> <p>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재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p> <p>•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p> <p>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p>

- | | |
|--|--|
| |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에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
|--|--|

1.3. 안전관리 강화대책

■ 목적

- 현장대리인 및 상주감리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공사현장을 무단 이탈함으로써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 5개의 자차구별 민간 건축공사장(신축) 공사관리·감독 부적정 세부 내용

- 현장대리인의 현장 무단이탈 및 변경신고 미이행
 - 공사장에서 현장대리인이 개인적인 용무를 사유로 대체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건설현장을 무단이탈
 - 허가권자에게 신고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을 배치한 채 공사를 진행
- 상주감리자의 현장 무단이탈
 - 공사가 진행 중일 경우 상주감리자가 개인적인 용무를 사유로 공사현장에 대체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건설현장을 무단이탈
- 결론
 - 건설공사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인한 건설 산업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설공사 현장의 점검 및 공사감리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

IX . 중대재해처벌법



1.1. 정의

-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
- ✎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음

■ 중대산업재해란?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 그 자체를 말함.

※ 다만,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2024. 1. 27.부터 적용

1.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 책임주체

구분	정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 ※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가진 정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어야 함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
개인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 보호대상

구분	정의
종사자	✓ 근로자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 제공자

1.3.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구분	사업주·경영책임자	법인 또는 기관(양벌규정)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 가능, 5년 내 재범시에는 형의 1/2까지 가중	10억원 이하 벌금

1.4.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1.5.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방법

- ①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정하기
- ②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및 관리하는 전담 조직 구성
- ③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
- ④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를 구하고, 유해·위험 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지원
- 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 ⑦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등의 이행 여부 점검
- ⑧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에 대비할 경우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 ⑨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참조

발 행 일 2023. 10.

발 행 처 강남구청 건축과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삼성동)

제작부서 도시환경국 건축과

홈페이지 <https://www.gangnam.go.kr>

본 제작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강남구청에 있습니다.

강남구
GANG NAM GU